

보도시점 : 2026. 6. 15.(월) 11:00 이후(6. 16.(화) 조간) / 배포 : 2026. 6. 15.(월)

노후 교량 등 SOC 철거 더 안전하게, 해체공사 안전관리 민관합동 TF 출범

- 국토부·산학연관 15개 기관 참여,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본격 가동
- 노후 SOC 진단부터 설계·시공·감리까지 전 과정 안전관리 체계 전면 점검

- 앞으로 노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(SOC) 철거 과정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.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해체공사 증가에 대비해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.
-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(화) 오후 서울에서 15개 산·학·연·관 전문가들과 함께 「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」(이하 “TF”) 착수 회의를 개최하여,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TF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
- 이날 회의에는 대한건설협회, 대한전문건설협회, 한국시설안전협회, 한국건설기술인협회,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, 대한토목학회, 한국건설안전학회,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국토연구원, 국토안전관리원, 한국도로공사, 그리고 해체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건설엔지니어링, 종합·전문건설, 안전진단 업체가 참여한다.

【 TF 구성 배경 및 경과 】

- (5.26)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 발생
- (5.26~27) 유관 산업계·학계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
 -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성명서(5.26), 대한토목학회 입장문(5.27) 발표
- (5.28)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착수
- (6.10) 국토부 1차관 주재 TF 기관장 합동회의 개최

- TF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, 노후 시설물의 안전 진단부터 해체공사의 설계·시공·감리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해 4개 분과(설계 / 시공·감리 / 안전진단 / 제도지원)로 구성된다.
 -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TF 운영을 통해 현행 안전관리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 - ▲SOC 해체 설계 방법·절차 현황 및 개선방안, ▲노후 SOC 안전진단 현황 및 실효성 강화 방안, ▲건축물 해체분야와 비교·검토를 통한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, ▲해체공사업 자격요건 개선방안 등이 주요 논의과제로 포함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“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이어 지난 달 해체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해체공사의 위험성과 관리 강화 필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”면서,
 - “민관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·시공·감리>	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	박동주	(044-201-3573)
		담당자	사무관	곽병철	(044-201-3574)
담당 부서 <설계>	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	책임자	과 장	허원석	(044-201-3564)
		담당자	사무관	김형준	(044-201-3566)
담당 부서 <안전진단>	건설정책국 시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	이성민	(044-201-4598)
		담당자	사무관	구단일	(044-201-3587)
담당 부서 <제도지원>	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기용	(044-201-3504)
		담당자	사무관	가필순	(044-201-3514)
			사무관	유기성	(044-201-4582)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TOMORROW